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2. 11.

행 정 재 무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29. 황선화 의원

나. 회부일자: 2022. 1. 27.

다. 상정일자: 2022. 2. 9.

(제264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황선화 의원

나. 제안이유

성동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 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3조)

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사.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나. 협조부서: 교육지원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라. 입법예고: 2022. 1. 21. ~ 2022. 1. 26.

####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가. 제안 취지

- 본 제정안은 성동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성동구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이라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며 관계되는 사람이라 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였음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고
-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이 국가,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확대는 구민에게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구민 스스로 성동구를 이끌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이념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 및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1) 및 「법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2)에서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사회적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지나친 갈등은 사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이렇듯 민주시민양성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 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상존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내용요소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참고1〉<sup>3)</sup>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				
(단위 : 표준화 된 값[1,2])				
순위	2004		2014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1	터키	1.412	멕시코	1.507
2	멕시코	1.387	터키	1.354
3	한국	1.271	한국	1.200
	OECD 평균	0.879	OECD 평균	0.904

※ OECD 34개국 중 한국은 3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한국경제연구원, 2016)

- 해외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1) 제2조(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중략...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제2조(정의)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중략...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이하생략...

3) <참고1>, <참고2> 출처: 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2018. 12. 13.)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중임  
 <참고2>

#### 해외 시민교육 사례

- **(독일)** 과거 나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정치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운영, 특히 통독이후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강화
- **(프랑스)** 비판적·능동적 시민을 길러낸다는 목표로 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을 의무화하고, 과목명을 '시민도덕교육'으로 개칭('15)
- **(영국)** 각종 청소년 문제 발생,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중등교육에서 '시민과목(Citizenship Education)' 필수화
- **(미국)** 민주주의 체제 유지·운영을 위해 사회과 국가교육과정(NCSS)에 주요 목표로 포함하고, '시민(Civics)', 사회과목(Social Studies) 등의 교과를 통해 교육 실시

- 이에, 교육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12.13.)을 발표하여 16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57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참고3>

####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현황

합 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sup>4)</sup> )	교육청
73	13	44	16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현대사회의 궁극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동구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서울시 및 기 제정 운영 중인 자치구의 조례와 비교하여 적용대상 및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방법에는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 등이 유사하며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는 등 적절한 제정안이라 사료됨

4) 서울 자치구(9):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동작, 서대문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